이 자료는 05.6.27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	**보 도 자 료** (산업자원부 공보관실)	담당과	기후변화대책팀
		담당자	조영신 팀 장 서기웅 사무관 이상헌 사무관
		전화번호	2110-5427
천리안 · 하이텔 : go epic, 나우누리 : go mocie, 인터넷 : www.mocie.go.kr			

온실가스 사전감축 착수 등 기후대책 본격화

- **온실가스 등록사무소 開所(7월) 및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을 개시**(하반기)
- **자발적 사전감축자, 추후 의무할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**
- **업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개발 등 업종별대책반 활동 강화**

1.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 추진

□ 교토의정서가 발효('05.2.16)된 가운데 **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**에서, 정부는 **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·관리하여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**할 계획

○ 먼저,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**금년 7월중 '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'를 개소('05.7.14)**하고 **年內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시작**할 예정

○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 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시 **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**하여,

- **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**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

□ **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**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**협상의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할 예정**

○ 현행 교토의정서는 EU·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.2% 감축할 것을 규정한 국제 협약(우리나라는 非의무부담국)이며,

○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부담에 관해서는 금년말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(11.28-12.9, 몬트리올)부터 200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,

○ 향후 협상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의무내용 및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구체적 보상방법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

□ 이 조치에 따른 **예상 등록사업 건수는,** 현재 추진중인 3,400여건의 자발적 협약 사업 중 등록최소 감축규모(500tCO_2) 이상인 **1,000건 정도이며, 최대 7백만tCO_2 정도의 감축실적**을 등록·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**기대**

* 자발적 협약 : 에너지를 생산·공급·소비하는 기업과 정부가 상호신뢰에 기초,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약

* 자발적협약 사업의 '03년도 에너지사용 절감율(3%) 적용시, 등록대상 사업의 온실가스 예상감축량은 최대 7.16백만tCO2로 추정

○ 정부는 **기업의 자발적 등록 참여 촉진**을 위해 **등록관련 소요 행정비용을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,**
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(1,230억원),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(3,259억원) 등의 **정부예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에 등록 권장**

□ **금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약속**은 정부가 **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항을 근거**로 추진하며, 금년 2월 수립한 **제3차 종합대책('05-'07)의 90개 세부 실행 대책**중의 하나로

○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,

○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

2.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활동 강화

□ 산자부는 지난 6.17(금) 발전·정유 등 **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반 활동**('04.12 구성)**에 대한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**를 개최

○ 상반기 활동점검 결과, ①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**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**을 통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한 **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,**

② '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'을 개발(발전, 정유, 철강 업종 '05.3월 완성, 나머지 5개 업종 금년말 완성)**하여 업종별 배출량 현황을 파악하고,**

③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 **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 수립활동을 수행**

* 8개대책반 : 발전, 정유,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제지, 반도체, 자동차

□ 향후, 산자부는 이미 **자동차, 반도체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환경관련 규제*가 강화**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,

○ 최근 6.1-2일 **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**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이 아닌 **업종별로 부여하는 방안**(sectoral approach)**이 새로이 논의**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,

* 부문별 목표설정(Sectoral Targets) : 국가 전체적으로가 아닌 부문 또는 여러 부문(발전·정유·철강 등 주요업종)에 대해 배출 감축 목표를 定하는 방법('05.6.1-2, OECD 지속가능발전 각료회의에서 논의)

○ **각 업종별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,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**

□ 한편, 산자부는 **업종별대책반**을 **'기후변화 포럼' 활동과 연계를 강화**할 예정

○ 이를 위해 업종별대책반에 간사를 지정하여 매월(4째 금요일) 주요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'기후변화 포럼'에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할 계획

○ '기후변화 포럼'은 5개 정부부처·산업계·유관기관·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과제 등을 토의하는 종합 논의기구로,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

< 기후변화포럼 논의 주제 >

* 6월(6.24) : ① 최근 OECD 지속가능발전위회의 등 기후변화협약 국제 논의동향, 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(안)
* 7월(7.22) : 청정개발체제(CDM)사업, 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 동향 및 국내 온실가스 시장 활성화 방안

〈 참고 : 해외 배출권거래, 청정개발체제(CDM) 등 탄소시장 동향 〉

□ EU, 일본 등 교토의정서상 의무부담국들은 **배출권거래제(ET),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 등을 통해 의무이행 노력중**

○ **EU**는 '05.1월부터 역내 온실가스 **배출권거래제**(대상 : 발전, 정유, 철강 등 20MW이상 사용 연소시설, 12,000개 사업장)를 시행

- 배출권거래 가격이 초기 8-10유로/tCO2에서 최근 20유로帶로 상승
- 연간 100억 유로 거래시장 형성 전망(Point Carbon社)

○ **일본**은 △6% 의무감축 목표분중 △3.9%는 흡수원(sinks), △1.6%는 **교토메카니즘**(CDM, 배출권거래)을 활용하여 이행할 계획

- 일본 '2004년에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(CER) 세계 총량의 41%를 구매(World Bank)

* 청정개발체제(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 :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(CER : 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)을 자국(선진국)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
* 배출권거래제(ET : Emissions Trading) :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□ 한편, 제18차 CDM 집행위원회('05.2)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**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**토록 결정

○ 국내에서도 2004.7월에 울산화학의 HFC열분해 사업을 CDM 사업으로 승인('04.7)하였고, 최근 한국 로디아폴이아마이드는 아산화질소(N_2O) 저감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('05.4)

○ 기타 한국휴캠스와 강원풍력이 CDM 사업 승인 요청을 준비 중에 있는 등 탄소시장의 기반으로 청정개발사업(CDM)의 활성화

< 붙임 1 >

1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약속 추진(안)

1. 추진 배경

□ 교토의정서 발효('05.2.16)를 계기로 **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능력 배양**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에 적극 대처

○ 자발적 감축실적의 등록 및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을 약속하여 **산업계의 자발적인 조기 감축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**

○ 조기감축으로 **에너지절약 및 경쟁력 제고** 효과 실현

※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체계구축 과제 포함

※ 법적 근거 :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, 『정부는 자발적 협약체결기업,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』

□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체계적 계량화를 통해 **청정개발체제,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참여** 기반을 조성

2. 추진 방안

〈 추진방향 〉

① **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시행 및 등록** **(=자발성)**

② **향후 의무부담시 조기감축에 따른 불이익 배제 (=보장성)**
(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)

(1) 감축실적 등록

가. 대상사업 : 일정규모 이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

□ **온실가스 감축 목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**

○ (i) 에너지효율개선 설비투자, (ii) 생산공정 개선 및 (iii)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

□ **등록대상 온실가스** : 교토의정서상의 6개 온실가스

○ 에너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(CO_2, CH_4, N_2O) 및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(PFC, HFC, SF_6)

* 세계반도체협회의 2010년까지 1997년 대비 10% PFC 배출량 감축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공정부문의 감축실적 등록체계 필요

□ **최소 감축규모** : 연간 500tCO_2(약 160TOE) 이상 감축 사업

○ 등록관련 행정비용(약 300만원)에 대한 정부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수준의 의미 있는 감축량(500tCO_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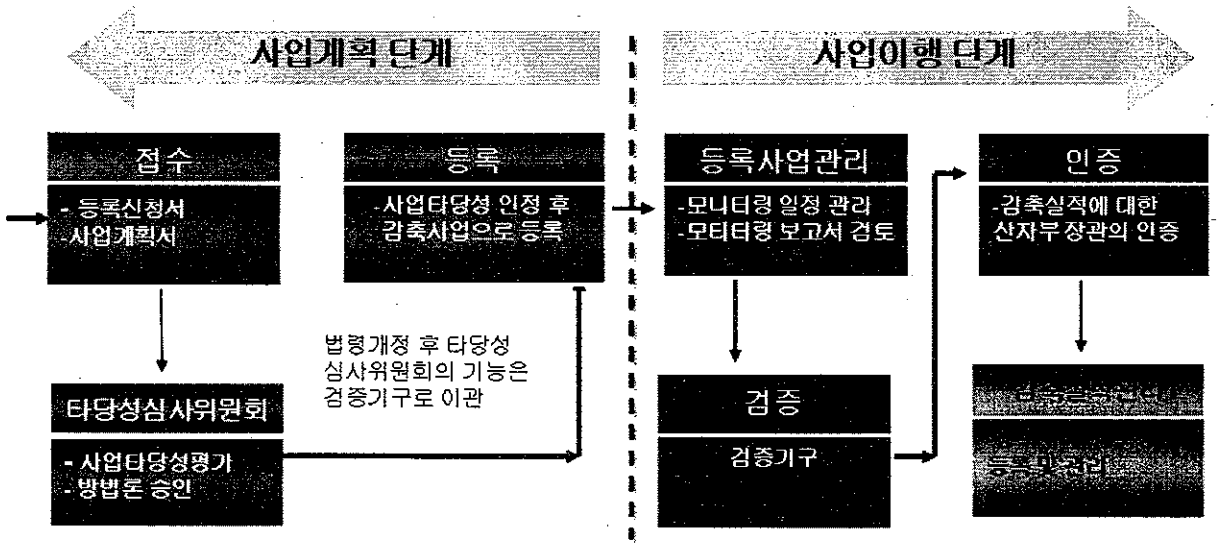
* 사업계획서 작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(약 300만원)에 대하여 예산범위내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, 현재 CER(감축실적)의 국제거래 가격이 5-6US$/tCO2임을 감안하여 500tCO2를 최소 감축규모로 설정

□ **사업 기준일** :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('05.3/4) 이후에 시작된 사업

○ 다만, 감축실적 등록시범 사업('04.9~'05.6)에 참여한 사업은 등록대상에 포함

나. 등록절차 : :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 결정

□ 등록 및 인증 절차(안)



□ 담당기관

○ 접수·등록·인증·감축실적관리 : 산자부(에너지관리공단)

-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**감축실적 등록소**를 설치

* 타당성 심사위원회 :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

○ 타당성 검토 및 검증 : "(가칭)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" 지정

- 온실가스 감축사업계획서상의 기준배출량(baseline) 방법론과 사업시행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거로 감축실적을 검증

(2) 감축실적 평가 및 관리 방안

□ 평가방안

○ 온실가스 종류별 **지구온난화 계수를 고려**한 감축실적 평가

○ 감축실적 전문기관에서 기준배출량(Baseline)과 측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감축실적 평가를 실시

□ 보상방안

○ 등록된 감축실적에 대한 **정부의 차별적 보상 약속을 사업 시행시점에서 명확히 하고, 구체적 보상방안은 추후 제시**

- 향후 의무부담 확정시 배출권거래제, 탄소세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방식 도입 등의 정책과 연계한 보상방안 강구

-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한계저감비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보상방안 수립·제시

○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**등록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은 등록확정시 예산범위내 보상 추진**

- '06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사업비내에서 **감축실적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*** **보상**

* 온실가스 감축실적 시범사업(04.9-05.6)의 경우, 평균 3백만원의 행정비용 소요

3. 향후 조치계획 : 제도·법령 정비 등

① 감축실적 등록소 개소('05.7.14일)

○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신청·등록·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등록소를 개소

② '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'(고시)마련('05.7월중)

○ 관계부처 협의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

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 접수('05.4/4)

④ 500tCO_2 이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간소화된 등록절차 및 규정 마련('06년 상반기)

⑤ 검증기관 지정('06년 하반기)

○ 사업 타당성 심사 및 감축실적 검증 업무를 담당할 "(가칭)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"을 지정

※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후, 2-3년 후에 실제로 감축실적이 발생하므로, 검증기관 정비는 사업 등록후 단계적으로 추진

< 참고 2 >

2 현행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계 및 내용

1.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현황

□ **조직 :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구성·운영**

○ '98.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, '01.9월 **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**(위원장: 국무총리)로 확대·개편 운영중

- 구성 : 재경·외교·과기·산자·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
- 기능 :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총괄조정

○ 산자부 민관합동 기후변화협약대책단("**기후변화 포럼**"), 8개 **업종별대책반**('04.12) 구성·운영

○ 산자부내 기후변화대책 전담팀 구성('05.2.14)

□ **정책 : 제1-3차 『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』 수립·추진**

○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분야별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

○ **제1차 종합대책(99~01)** : 부문별 감축사업, 감축기반 구축사업, 기술개발사업 등 36개 과제

○ **제2차 종합대책(02~04)** : 협상역량 강화,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사업, 대국민 홍보사업 등 84개 과제

○ **제3차 종합대책(05~07)** : 협상이행기반 구축사업,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,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(산자부 35개)

2. 제3차 정부종합대책(05~07년) 개요

□ 추진 방향

○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**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**

○ **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**을 위한 기반 구축

○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**부정적 영향 최소화**

□ 추진 목표

○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소한으로 유지

- 1차(99~01) : 4.5%, 2차(02~04) : 3.5%, **3차(05~07) : 2.1% 목표**

○ 에너지原단위 개선

- (99) 0.319 → (01) 0.305 → **(04) 0.303 → (07) 0.277**

※ 에너지원단위(TOE/천$) : GDP 1천달러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

□ 추진 과제

○ 협약 이행기반 구축 : 총 29개 과제

- 의무부담 협상대책마련, 온실가스 통계작성, 온실가스 감축연구개발, 교육·홍보,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

○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: 총 45개 과제

- 에너지 절약대책강구, 에너지 이용효율개선, 건물·수송·폐기물·농축산·임업부문 등

○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: 총 16개 과제

-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,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등

□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

가. 협약이행 기반구축 사업

○ 제2차 이행기간('2013~'2017)에 대한 감축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**우리나라에 적합한 참여방식 및 대응논리 개발**

- 의무부담 참여압력에 공동대응키 위해 **주요국들과의 공조체계 강화** 및 **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적극 지원**

○ 국제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따른 **국가온실가스 통계 구축,** 국내 **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**

○ **대국민 홍보,**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반영 및 **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단의** 자체계획 수립·추진 지원

※ 업종별대책단 : 발전, 정유, 철강, 석유화학, 시멘트, 제지, 자동차, 반도체

나.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

○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자발적 협약 사업, ESCO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, **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자금 및 세제 지원**

○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확대, 신재생에너지 설비자금 및 발전차액 지원 등을 통한 **에너지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추진**

○ **건물 설계단계의 에너지 절약기준 강화** 및 건축물별 에너지 총량 관리

○ **간선급행버스 도입,** 통행료 **전자지불시스템,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** 등을 통해 수송·교통부문 에너지 절약

○ 숲가꾸기, 도시숲조성의 지속 확대추진으로 **산림흡수원 확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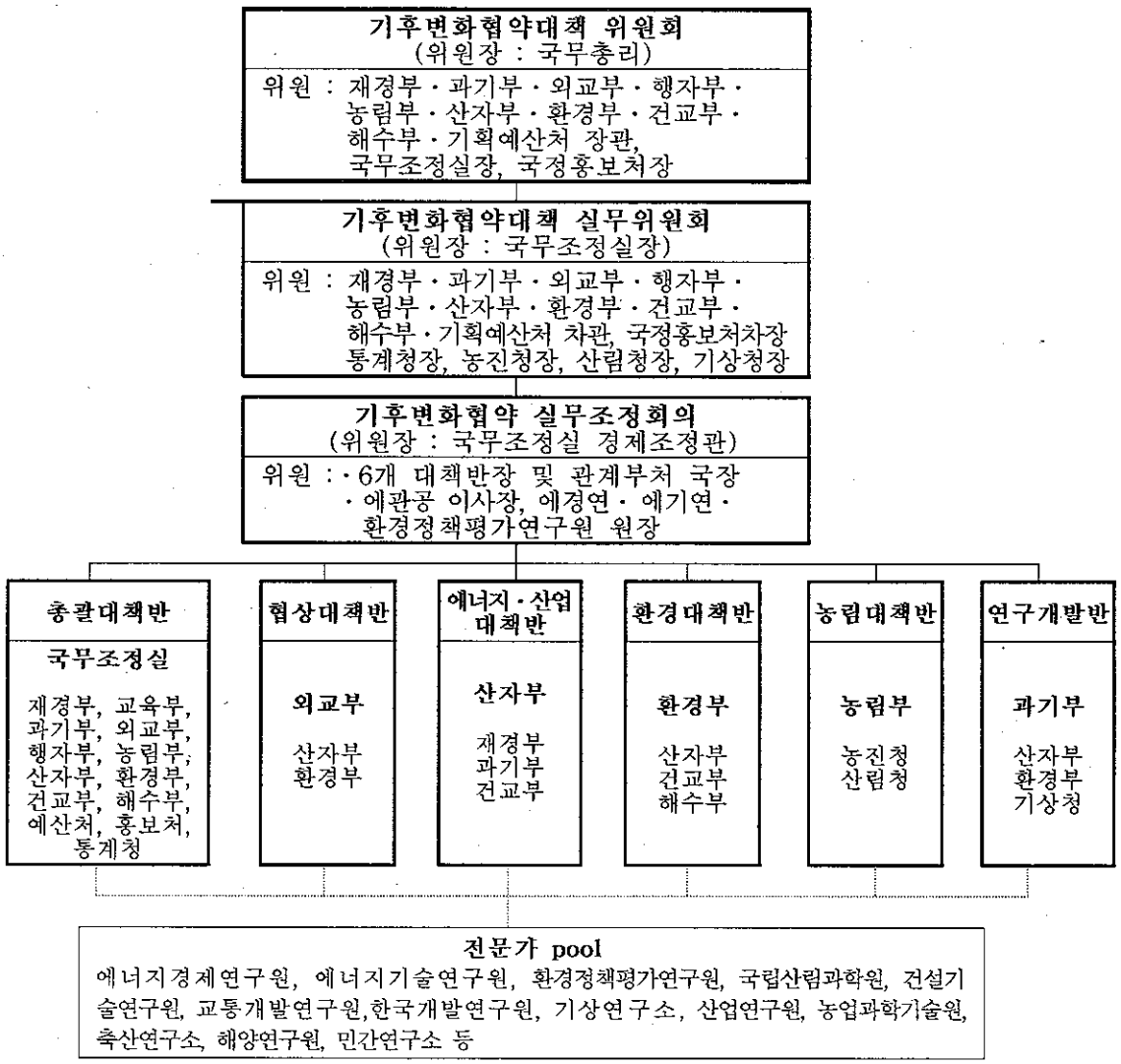
다.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

○ **기후변화 정보수집**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**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분석**

○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 및 **선진 방재시스템 구축**

○ 기후변화에 따른 **생태계 변화 모니터링** 및 기후변화에 따른 **건강영향평가**

< 기후변화협약대책 정부추진 체계도 >



< 붙임 3 >

3 산업계 업종별대책반 활동 및 기후변화 포럼 활동

1. 8개 업종별대책반 구성 및 활동

□ 산자부는 **지난 6.17(금), 2004.12 발족한 8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대책반 상반기 활동 점검회의를 개최**

○ 점검 결과, 협회 중심의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제고하고 업종별 배출량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

□ 향후, 업종별대책반에서는 외국 선진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사례 조사 및 연구를 통해

○ 일본의 "자주행동계획"과 같은 **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을 2007년말까지 수립**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

(1) 추진현황

○ **'04.12월** 발전·정유 등 에너지다소비 8대 업종별대책반 구성

○ 반장 : **담당과장, 관련협회 상근부회장(또는 임원) 공동**
반원 : 사무관, 협회, 에관공, 학계, 주요기업 등 10명 내외

업 종	발 전	정 유	철 강	석유화학
부 서	총괄정책과	석유과	기초과	기초과
협 회	간사	석유협회	철강협회	석유화학
기 업	발전사 5사	SK,LG등	포철 등	LG 등

업 종	시멘트	제 지	자동차	반도체
부 서	생물화학	생물화학과	수송기계과	반도체과
협 회	양회협회	제지협회	자동차협회	반도체협회
기 업	쌍용 등	한솔 등	현대,GM대우등	삼성,하이닉스

○ **운영 : 업종별로 월별 1회(또는 격월) 개최**

○ **주요 활동실적**

i) 기후변화협약대응 홍보·교육

- 세미나 개최 : 발전(5.31), 철강(6.2, 6.28-29), 석유화학(6.2)

ii)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및 양식 검토

-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지침 및 양식개발('04.5~'05.3)과 연계 : 발전, 정유, 철강, 제지 등

iii) 선진 기업의 기후변화 협약 대응사례 연구

- 발전, 정유, 철강, 석유화학, 제지 산업대책반

iv)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계획(안) 논의

(2) 향후 운영방안 및 활동목표

○ **월별 1회 업종별 대책반 회의 정례 개최 (필요시 격월)**

○ **단기 활동목표 : ① 기후협약 대응 홍보·교육**(업종내 및 업종별 정보격차 해소), **②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**(「기업별 온실가스 산정지침 개발」 및 「저감잠재량 분석」 계획과 연계), **③ 선진기업의 대응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**

○ **장기 활동목표 : ① 업종별 자발적 감축대책 수립('07말) → ② 기업의 경쟁력 강화**

2. 기후변화 포럼 구성 · 활동

□ 배경

○ 교토의정서 발효('05.2.16)로 금년말부터 교토체제 이후(Post-Kyoto)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본격 시작

○ 이에,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이 협약 동향, 협상대응 전략 수립 및 기후협약 대응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, 향후 정부 · 기업의 정책 방향 논의 및 정책과제 발굴을 도모

□ 추진현황

○ '04. 2월 구성된 협상대책반(산자부, 에경연 등 10여명)을 '04. 7월부터 참여기관 및 전문가를 확대, 기후변화 포럼* 매월 운영

* 정부 4, 정부출연 5, 산업계 9, 학계 3 등 40여명(20명 내외 참석)

○ '05. 3월부터 기후변화포럼의 참여자를 보강, 확대

□ 운영방식

○ 성격 : 정보 공유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**포럼**

- 산자부(자원정책국장) 주관하에 외교 · 환경 · 국조실 · 지속위 등 정부기관(과장급), 전경련 · 대한상의의 환경대책반 및 에경연 · 에관공 등 전문가로 보강하여 **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 논의기구화** → 논의 사항은 정책 반영 추진

○ 개최 : 매월 1회 각 기관별로 주제를 정하여 순회 개최
(매월 3째주 금요일 원칙하에 매월 차기 모임 일자 · 장소 결정)

기후변화협약 에너지·산업부문 전문가 포럼(6월) 개최

□ 목적

○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 등 대한 산업계·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발굴

□ 주제(안)

① 포스트 2012 협상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
(최근동향(OECD 지속가능발전위회의+제22차 부속기구회의) 포함)

②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(안)

* 3월 : (1)산업계 건의사항, (2)기후변화포럼 운영 활성화 계획
* 4월 :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계획(안)
* 5월 :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기구회의(5.16-27) 참석

□ 일시 및 장소 : '05.6.24(금) 16:00-18:00, 에너지경제연구원

□ 참석

○ 산자부 및 관계부처 : 자원정책국장, 기후변화대책팀장, 사무관 등
○ 정부출연기관(5) : 에경연, 환경연, 에기연, 환경공, 에관공
○ 산업계(12) : 대한상의, 지속가능기업발전위, LG환경연, 삼성연 등
○ 학 계(3) : 강희정(건국대), 강승진(산기대), 전의찬(세종대)

□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고(발표자/진행)
16:00-16:30	○ 포스트-2012 협상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등 ○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 계획(안)	임재규 박사(에경연) 조영신 팀장(산자부)
16:30-17:50	안건 토론	(에너지경제연구원)
17:50-18:00	향후일정 논의	(주봉현 국장)

* 7월 의제 : 청정개발체제(CDM)사업, 배출권거래 등 탄소시장 동향 및 국내활성화 방안